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사업 반대 시위

제도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0년 가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시와 인근 지역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신중양역 건설 사업인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저항 행동이 벌어졌다. 연인원 약 50만 명이 참여한 이 대규모 저항 행동의 참여자들은 이 사업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은행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역 상권과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주정부와 정당들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했고, 오히려 정부·경찰과 참여시민들 간의 반목이 심각하게 고조되었다. 선출된 의회 권력이 결정한 정부사업이 자생적 시민 행동으로 저지된 이 사건은 독일 사회에서 권력과 시민,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관계에 관한 많은 토론을 유발시켰다. 또한 2011년에 실시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의회 선거에서는 58년 동안 집권해 온 기독교민주당이 패배하고, 소수정당이던 녹색당이 최초로 주총리를 배출하여 사민당과 함께 녹색연정을 구성하는 정치적 이변이 이어졌다. 제도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에 직면하여, 사민당과 녹색당 등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비당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당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1월 27일에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슈투트가르트 21 사업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이 사업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은 독일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더 성숙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11년 12월

[서론]

2010~11년에 독일 사회에서는 정부정책과 의회의 결정에 개입하는 시민의 정치행동, 정당과 시민 사이의 괴리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0년에 주정부의 신중양역 건설프로젝트인 ‘슈투트가르트 21’ (Stuttgart 21: 이하 S21) 사업에 반대하여 일어난 대규모의 시민 저항행동, 함부르크에서 기민당-자민당 정부의 교육개혁에 반대하여 일어난 시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전역에서 전개된 탈원전 캠페인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2010년 가을,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수도인 슈투트가르트시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민행동인 S21 사업 반대 시위는 독일 사회에서 권력과 시민의 괴리,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충돌에 관한 토론을 촉발시킨 대표적 사건이었다. 이 시위는 초기엔 슈투트가르트시 및 인근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국지적 분쟁처럼 보였다. 하지만 저항의 규모와 강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커졌고, 곧 전국적 이슈로 확대됐다.

S21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 권력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었지만, 거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삶의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정치와 시민의 괴리에 대한 반성,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한 토론이 활발히 벌어졌다.

S21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 권력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었지만, 거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삶의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된 사건이다.

[1. ‘슈투트가르트 21’ 사업 반대 시위]

(1) 전개 과정, 주요 쟁점, 저항 행동의 특성

S21 사업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의회에서 결정된 정부와 민간자본의 협력 사업으로서, 사업의 핵심은 슈투트가르트시의 구중양역을 헐고 새로운 중양역을 건설한다는 데 있었지만 실제 사업 내용은 중양역 건축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궁극적 취지는 신중양역을 중심으로 좁게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넓게는 서유럽 여러 지역들을 포괄하는 거대한 상권과 소비공간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슈투트가르트시의 중요한 문화 공간인 중양공원을 폐쇄하고 지상과 지하에 교통시설과 소비시설을 건설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필연적이었다. 그래서 육중한 건설장비들이 중양공원의 오래된 거목들을

뿌리째 뽑는 공사는 슈투트가르트 21 사업의 파괴적 성격을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또한 노인과 아이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공원의 나무들을 둘러싸고 공사를 저지하는 행동은 슈투트가르트 시민 행동의 상징적 장면이기도 했다.

이미 2009년부터 시작된 오랜 예열 기간을 거쳐, 2010년 10월부터 집중적인 저항 행동과 경찰과 시민의 충돌이 계속된 이 사건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연인원 약 50만 명이 참여하였다. 저항이 가장 고조되었던 10월 초순의 주말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150,000명, 경찰 추산으로 65,000명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슈투트가르트 시민들은 노조나 운동 조직이 주도하는 저항 행동과 상당히 다른 행동양식을 보였다. 조직적, 전략적, 목적의식적 행동보다는 참여시민 개개인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소통·연대가 압도적이었다. 시민들은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중무장한 진압경찰과 눈앞에서 대치하는가 하면, 공사 현장을 강제 점거하고 춤과 노래, 환담을 나누며 강경한 저지 행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시위 진압 과정에서는 중년층 시민들뿐 아니라, 청소년과 노인들까지 경찰에 의해 유혈적인 부상을 입는 사태도 일어났는데, 시민들이 이런 광경들을 모두 동영상으로 만들었고, 이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퍼져 나갔다.

슈투트가르트 시민들은 노조나 운동 조직이 주도하는 저항 행동과 상당히 다른 행동양식을 보였다. 조직적, 전략적, 목적의식적 행동보다는 참여시민 개개인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소통·연대가 압도적이었다.

〈표1〉 슈투트가르트 21 사업과 시민 저항 행동의 전개 과정

| 시기 | 사건 |
|-------|---|
| 1994년 | 독일철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총리, 슈투트가르트 시장, 연방 교통부장관(CDU)이 S21 사업 계획 발표. |
| 1995년 | 독일철도, 독일연방채권(BUND),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시가 S21 사업 계약 체결. |
| 2006년 | S21 사업에 반대하는 첫 번째 소송 제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고등행정법원에서 기각. 이에 반발하여 S21 결정을 관한 주민투표 서명운동 시작. |
| 2007년 | 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 공식화. 주민투표에 67,000명 서명, 그러나 청원 기각. |
| 2008년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정부에서 S21 사업과 신철로 건설을 위해 51억 유로 지급. 연방의회에서 2009년 예산 의결. 건설 착공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 |
| 2009년 | 슈투트가르트 시의회 선거에서 다년간 S21 사업에 반대해 온 녹색당이 압승하여 최대 의석 확보. S21 반대 시민들이 매주 월요일 시위를 벌이는 '월요 시위' 시작. |
| 2010년 | 2월 공식적인 S21 공사 착공. 7월 S21 반대 "프로페스티발"(Profestival) 개최. 대규모 시위대가 슈투트가르트시 구중앙역 북쪽 지역 점거. 신철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공개 촉구. 밤샘 시위 지속. 8월 연방환경청에서 S21 사업 비용이 약 110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 주 최측 추산 약 1만 명의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는 가운데 구중앙역 북쪽 부분 철거. 월요 데모 등 정규 시위에 매회 수만 명의 시민 참여. 9월 슈투트가르트시 중앙공원(솔로스파크)의 강제 철거 시작. 이에 항의하는 중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경찰이 물대포, 최루탄 등 강경 진압하여 수백 명 부상("검은 목요일"). 이제까지 S21 찬성해 온 사민당이 시민들의 결정에 맞기자는 입장으로 전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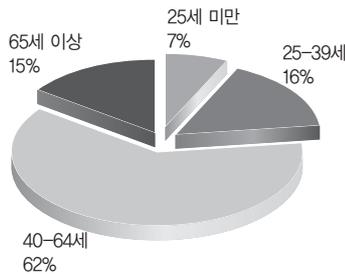
| | |
|----------|---|
| 10월 5일 | 10월 1일, 주최측 추산 10~15만 명의 시민이 S21 반대 시위에 참여. 10월 5일, 구중앙역 서쪽 지역 철거공사 중단. 10월 6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총리가 전 기민당 사무총장인 원로 정치인 하이너 가이슬러에게 중재 요청. |
| 12월 | 연방의회 교통상임위에서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의 S21 사업진행 중단 안이 기민당, 자민당의 반대로 기각됨. |
| 2011년 3월 |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58년만에 기민당 최초로 실권. 녹색당-사민당 연정 구성. 최초의 녹색당 주 총리 탄생. S21 공사 잠정 중단. |
| 11월 | 11월 29일, S21 사업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계속 여부에 대해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최초의 주민투표 실시. S21 반대론자들의 패배. |

(2) 참여시민의 특성과 정치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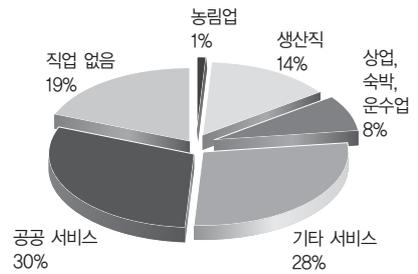
이 저항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베를린사회과학원(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WZB)의 세계적인 사회운동 연구자인 루흐트(Dieter Rucht)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2010년 10월 18일에 슈투트가르트 시내의 시위 현장에서 1,43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했다(Rucht et al., 2010).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연령대는 40~64세가 가장 많았고, 청년층과 청소년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교육 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참여자 중 대졸자(종합대와 전문대) 비율은 50%로서 독일사회 전체의 대졸자 비율(26%)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종사하는 직업 분야는 공공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고, 생산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그림1〉과 〈그림2〉).

〈그림 1〉 참여자 연령 분포



〈그림 2〉 참여자 직업 분포



슈투트가르트 21 반대 시위에는 집회 시위 등 저항 행동에 처음 참여한 사람도 많았다. 이제까지 한 번도 집회시위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21.5%, 지난 5년 간 집회 시위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46.3%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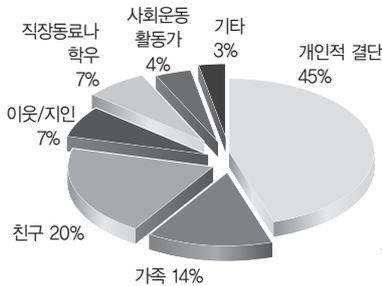
슈투트가르트 21 반대 시위에는 집회 시위 등 저항 행동에 처음 참여한 사람도 많았다. 이제까지 한 번도 집회시위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21.5%, 지난 5년간 집회 시위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46.3%에 달했다. 1~5번 참여해 봤다는 응답자도 37.4%나 되었으니, 집회시위의 경험이 전혀 없거나 간헐적으로만 참여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83.7%에 이른다. 하지만 참여시민들의 태도는 매우 급진적이었다. 응답자의 43.7%가 저지 행동, 점거, 시민 불복종 등 직접 행동에 이미 참여했다고 대답했고, 22.4%가 앞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무려 66.1%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순 집회나 거리 시위보다 더 급진적인 직접 행동을 선호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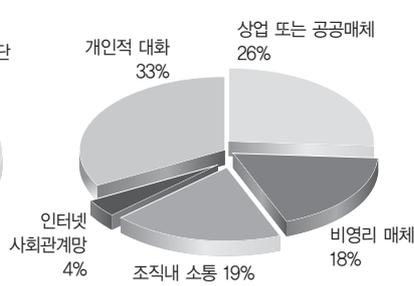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이 교회, 노조, 환경, 자선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조직들은 시위 참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결단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고 가족·친구와의 대화가 참여의 계기가 됐다는 응답자가 40%나 되는 데 반해, 사회단체나 운동단체의 영향을 받은 응답자는 극소수였다. 이에 상응하여 시위 참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보의 원천(복수 응답)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면대면 대화를 꼽았다. 흥미로운 것은 인터넷상의 소셜네트워크를 꼽은 응답자가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이는 참여자의 다수가 40세 이상의 중년층이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그림3〉과 〈그림4〉).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이 교회, 노조, 환경, 자선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조직들은 시위 참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시위 참여 권유자



〈그림 4〉 주요 정보 획득경로



‘슈투트가르트 21’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점을 꼽으라는 질문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들은 “너무 큰 비용이 드는 사업이다”(46.3%), “은행과 건설 대기업만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33.3%), “사업 계획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33.3%), “이 사업이 건설하려는 신중광역의 이점이 별로 없다”(27.5%) 등을 꼽았다.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오히려 위험하기만 한 사업을 은행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민주적으로 결정하여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S21 사업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담합의 산물이며, 시민들을 배제시킨 사업이었다고 생각했다.

응답자들은 기존 정당과 정치에 대해 깊은 불신을 표현했다. “정치의 세계에선 뭔가 은폐된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견해에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97.3%)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정당들은 내 생각엔 관심이 없고, 한 표 얻는 데만 관심이 있다.”(80.7%), “나 같은 사람이 정치인들에 대해 의견을 내도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74.8%)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 불신이 곧 정치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선거는 아무 소용 없고, 정당들은 어차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라는 견해에는 59.7%가, “정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너무 복잡해서, 정치를 하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77.0%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즉 시민들은 정당과 정치인들을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다.

2. 독일 사회 내의 토론과 정치적 영향

(1) ‘슈투트가르트 21’ 쟁점의 복잡성

이처럼 S21을 둘러싼 갈등은 첨예하고 격렬했지만, S21 사업이 ‘선/악’, ‘정의/불의’의 이분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 쟁점은 아니었으며, 또한 갈등과 적대의 축이 ‘권력/시민’으로 분명히 나뉘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우선 S21 사업은 헌법질서상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기민당, 사민당 등 주요 정당들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정당과 의원들은 분명 선거라는 합법적 제도에 따라 시민이 선출하였다. 따라서 반대 여론 때문에, 혹은 이 사업을 주민투표에 붙여서, 정치적 대의기구인 의회의 결정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위가 격화되면서 S21 사업에 찬성하는 시민들 역시 매주 1회씩 정기적인 집회를 여는 등 시민사회 내의 이견도 컸다. 이 쟁점에 가입하는 시민네트워크 역시 찬·반 입장으로 팽팽히 갈라져 있었다. 이 때문에 1인 1표 원리에 입각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이 사업에 반대하는 여론이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구도였다. 실제로 2011년 11월 27일에 S21 사업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여부를 놓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역사상 최초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S21 반대론자들이 패배했다.

(2) 학문적 토론과 쟁점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S21 사업’이라는 쟁점에 내포된 복잡성뿐 아니라, 독일 학계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이 민주주의와 대의정치의 현재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놓고 많은 토론이 진행됐다. 정치이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슈투트가르트 시민 행동의 함의는 단순하지도, 자명하지도 않다.

시민 행동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치 참여가

S21 사업은 헌법질서상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기민당, 사민당 등 주요 정당들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정당과 의원들은 분명 선거라는 합법적 제도에 따라 시민이 선출하였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생기 있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동력이라고 해석했다.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무엇보다 정당과 대의기구가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를 정치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래한다고 했을 때,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용기 있는 실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Rucht, 2011).

하지만 이런 입장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도 많이 있다. 정당과 대의정치의 많은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격하는 시민들은 종종 정부와 정당에 대한 과장된 불신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면한 정책적 과제의 복잡성을 단순화하여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Schwann and Bussemer, 2011). 뿐만 아니라 시민행동 자체의 사회적 선택성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오늘날의 시민 직접행동의 참여자들은 많은 경우 교육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간계급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서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정당정치의 대표성 문제를 직접 행동이 해결하진 못한다는 것이다(Merkel and Petring, 2011).

(3) 정치적 영향과 정당 정치의 변화

S21 반대 시위는 직간접적으로 정당 정치의 권력 지형의 변화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최대의 승자는 녹색당(Die Grünen)이었고 최대의 패자는 보수 기독교민주당(CDU)과 자유민주당(FDP)이었다. 녹색당은 S21 사업이 처음 공표된 시점부터 수년간에 걸쳐 일관되게 이 사업의 문제를 비판하며 반대 입장에 섰다. 한편 사민당은 199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기민당, 자민당과 더불어 S21을 함께 결정하고 또한 지지해 왔으나, 2010년 시민 저항이 고조되자 입장을 바꾸었다.

S21 반대 시위의 직접적인 정치적 결과는 그다음 해인 2011년 3월 27일에 실시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선거에서 나타났다. 이 선거에서 기민당은 58년 만에 처음으로 권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녹색당(24.2%)은 23.1%를 득표한 사민당(SPD)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여 사상 최초로 주 총리를 배출하면서 적녹 연정이 아닌 녹색 연정 정부를 구성했다. 녹색당의 급성장은 2011년에 이어진 여러 주의회 선거에서도 계속되었다. 9월 5일에 실시된 동독 지역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의회 선거에서는 사민당(35.7%)이 기민당(23.1%)을 누르고 재집권에 성공했으며, 녹색당(8.4%)이 처음으로 주의회의 원내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독일의 16개 모든 주에서 원내진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9월 18일의 베를린 선거에서도 사민당이 28.3%를 얻어 3번 연속 집권에 성공했는데, 여기서도 녹색당(17.6%)은 지난 선거보다 4.5%나 높은 득표를 했다.

사민당은 2011년에 연속적으로 치러진 6개의 주의회 선거에서 모두

S21 반대 시위는 직간접적으로 정당 정치의 권력 지형의 변화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최대의 승자는 녹색당(Die Grünen)이었고 최대의 패자는 보수 기독교민주당(CDU)과 자유민주당(FDP)이었다.

승리하여 집권 정부에 참여하는 쾌거를 올렸지만, 이 중 많은 주에서는 4년 전에 비해 오히려 득표율이 하락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사민당 내에서는 과감한 혁신의 대안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의 결과가 당원제도와 당내 의사결정제도의 혁신이다. 일찍이 미헬스의 관료제 이론의 모델이 될 정도로 견고한 조직을 발전시켜 온 독일 사민당은 지금 당원이 아닌 '서포터' 계층을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과격적인 조직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Niedermayer, 2011).

3. 정치와 민주주의의 변화에 대한 요구

이 글에서 다룬 S21 반대 시위의 특성들은 단지 하나의 사건에만 국한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독일사회의 전반적인 경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2011년에 정치 현실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 결과는 S21 반대 시위 참여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큰 틀에서 정확히 일치했다. 즉 독일 시민들은 한편으론 정당과 정치인, 대의기구 등 제도정치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이다(Krell and Mörschel, 2011).

시민들은 이제 몇 년에 한 번 주어지는 투표권을 통해서만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정치 과정의 중요한 국면에서 즉각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길 원하고 있다. 정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평적이고, 소통적이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으로 변할 것을 요구 받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정치적 참여와 개입을 21세기 정치 과정의 '정상적' 일부로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크리스토프 폴만,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신진옥 안두순 안석교 이삼열 정범구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feskorea@fes.or.kr

<http://www.fes.or.kr>

FES Information 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1 © by Friedrich Ebert Stiftung, Korea Office